

목 차

★ 식 순

★ 기조연설

5

선진 강대국의 조건: 신국부론 /성경룡 국가균형발전위원장

★ 주제발표

12

지역혁신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박재묵 충남대 교수

★ 결성회의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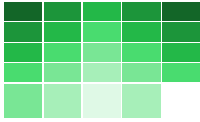
30

창립배경 및 추진경과

규약(안)

조직구성 및 임원 인선(안)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식 순

★ 제1부 결성회의 (15:00~1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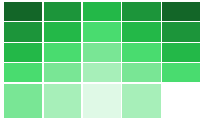
- 성원보고
- 서기선출
- 회순채택
- 안건심의
 - 의안 1호. 규약 제정의 건
 - 의안 2호. 조직 구성 및 임원 선출의 건
 - 의안 3호.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의 건
 - 의안 4호. 기타 안건
- 회의록 채택
- 폐회

★ 제2부 창립 기념 세미나 (16:00~17:30)

사회 : 류진석(충남대 교수, 대전시민사회연구소장)

- 개 회 사 : 안정선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이사장
- 격 려 사 : 대전광역시장 / 충청남도지사
- 축 사 : 양현수 대전지역혁신협의회회장
김용웅 충남지역혁신협의회회장
- 내빈소개
- 기조연설 : 성경룡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 주제발표 및 토론 '지역혁신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 좌 장 : 안성호(대전대 부총장,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의장)
 - 주제발표 : 박재목(충남대 교수, 대전충남지역혁신연구회 공동대표)
 - 지정토론 : 강현수(중부대 도시부동산학과)
기영석(목원대 행정학과)
심문보(한서대 행정학과)
김제선(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집행위원장)

★ 제3부 만찬 -충남대학교 영탑홀 (17:30~)



기조연설

선진 강대국의 조건 : 신국부론

성경룡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 I. 3차원 발전론
- II. 역사상의 강대국
- III. 한국의 진로
- IV. 전략적 과제
- V. 미래 국가경영의 과제

선진 강대국의 조건 : 신국부론

성 경 립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I. 3차원 발전론

1. 내포적 차원 (intensive dimension)

□ 창조, 지식, 혁신, 연구개발

■ “강대국론”

- ①문화력 (자유, 사상, 상상력, 창조력, 문화예술 등)
- ②기술력 (과학기술, R&D/C&D, 산학협력)
- ③산업경제력 (고부가가치 산업, GDP, 통상/수출역량)
- ④내부통치력 (징세/징병 등 행정역량, 제도, 지방규율, 사회질서, 협력)

2. 외연적 차원 (extensive dimension)

□ 공간, 외부 확장

■ “강대국론”

- ⑤군사력 (해군/육군/공군전력, 전쟁역량)
- ⑥외교/통상력 (동맹결성, 통상협정)

3. 시간적 차원 (time dimension): 속도

□ Toffler의 속도론: 속도의 가속화와 비동시성의 문제

- 기업: 시속 100마일
- NGO: 시속 90마일
- 정부: 시속 25마일
- 학교: 시속 10마일
- 정치조직: 시속 3마일
- 법률: 시속 1마일

■ “강대국론”

- ⑦ SOC (도로, 철도, 항만, 공항, 교통수단)
- ⑧ 정부/기업/지역/교육혁신

II. 역사상의 강대국

1. 육지를 지배한 강대국

- 그리스(알렉산더), 로마제국, 몽골제국(칭기스칸), 프랑스(나폴레옹), 독일(히틀러)

2. 바다를 지배한 강대국

- 포르투갈, 스페인, 네델란드, 영국, 미국

3. 공중과 우주를 지배한 강대국

- 미국

4. 공통점

- 일차적으로는 초기단계의 내포적 발전 주도 (창조/혁신)
 - 몽골 (말을 이용한 신속한 기동)
 - 스페인 (화승총, 중앙집권적 절대국가)
 - 영국 (증기기관, 공장제 생산방식, 기차와 증기선)
- 다음으로는 군사적 정복 (공간)
 - 해군력 (스페인, 포르투갈, 네델란드, 영국, 미국)
 - 육군력 (몽골, 프랑스, 독일, 러시아, 미국)
- 이어서 내포적 발전의 심화와 외연적 확장 가속
 - 여기에 성공하는 나라들이 지배력을 확대하고 강대국 지위를 영속적으로 유지

5. 3차원 발전을 종합적으로 가장 잘 이룬 나라

- 로마제국, 몽골제국, 영국, 미국
- 주요 특징: 개방성, 다양성, 포용성, 창의력, 지식/기술중시 →혁신+속도

III. 한국의 진로

1. 현실

- 왜 부동산(2006년말 520조원 규모)이 부동산에 몰리는가?
 -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결과 (2007.1.15, 350개 기업 대상)

향후 3년 이후의 미래수익원 확보 여부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53.5%)
신규사업 추진이 부진한 이유	신사업 발굴이 어려움 40.4%, 투자자금 조달애로 22%, 진입장벽 등 각종 규제 16.3%, 기술력 등 내부역량 부족 12.7% - 전체적으로 기업내부의 요인: 53.1%

- ☐ 한국인의 總창조역량·혁신역량의 부족 때문인가?
- ☐ 산학단절 및 기술과정(technology process)의 단절 문제
 - 아직도 1세대/2세대 연구개발의 단계?
- ☐ 연구소(과기부 등 지원)와 대학(교육부 등) 不死 構造
- ☐ 한국기업의 기술역량 편차: 대기업(폐쇄형 R&D), 소수의 혁신형 기업, 다수의 기술 장님
- ☐ 종합평가: 내포적 차원(medium-low), 외연적 차원(medium-high), 시간적 차원 (medium-high)
 - 중간 수준의 국력
 - 선진국/강대국으로 도약하기에는 상당히 취약

2. 단계별 경제발전 전략

- ☐ 1만불까지: 요소투입형 + 햇불 공사 (근육형 노동)
- ☐ 2만불대 도약: 중간 수준의 기술혁신 + 공간적 확장(세계경영)
- ☐ 3-4만불 시대: 새로운 국부창출 전략 필요 → 창신형 경제 (내포적 차원) + 균형발전과 세계경영(외연적 차원, 공간차원) + 속도경영 (시간 차원)
 - 여기에 다양한 사회협약을 통한 협력, 질서, 가치창출 추구
 - 최고의 리더십 유형: 세종형(창조, 혁신) + 칭기스칸형(확장, 속도)

3. 목표

- ☐ 창조대국, 균형발전사회, 개방형 통상국가
- ☐ G7 지향

IV. 전략적 과제

1. 문화적 혁신

- ☐ 자유, 개방성, 다양성, 창조성의 함양
- ☐ 상상력과 창의력: 문화/예술과 지식/기술의 원천
- 강대국의 사례: 미국, 영국, 네델란드

2. 인재양성의 새로운 방향 (창조성 교육과 기업가 교육)

- ☐ 미국의 우수성: 자유, 개방성, 다양성, 전세계로부터 인재유입
 - 미국의 1등: 5%의 인구로 세계 최대 노벨상 수상자 보유 (296명) → 인재부국 + 경제부국 (10억달러 이상 371명)
- ☐ talent war (Richard Florida)
 - 중국: 국가, 인종, 종교, 예산에 관계없이 전세계로부터 우수 인재를 유치하라
- ☐ 오마에 겐이치: 네델란드의 교육 (유치원때부터 외국어교육, IT 교육, 리더십 교육, 기업가교육)
 - 창조형 교육: 암기/시험/서열식 교육의 한계 극복
 - global leader 양성: 영어와 중국어 등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세계를 상대로 기업을 경영한 수많은 젊은 인재를 키워야 나라의 미래가 밝다
- 강대국의 사례: 미국, 네델란드, 최근의 중국

3. 기술과정(technology process)의 충실화

- ☐ 기술개발: 수요자의 요구 반영
- ☐ 기술평가: 누가, 어떻게?
- ☐ 기술거래: 어디서?

- ☐ 기술이전: 기술이전을 통한 가치의 창출
- ☐ 기술창업: 기술과 자본의 결합, 벤처생태계 조성
- NTIS: 연구자/장비/성과 자료를 총망라하는 국가DB 필요
- NBIS: 기업의 기술수요를 총망라하는 국가DB 필요

4. 개방형 C&D (제4세대 R&D)

- ☐ Procter & Gamble의 경험
- ☐ 기업과 대학/연구소의 상생
- ☐ 대학과 연구소가 시장/산업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
- ☐ Connect Korea: 단절된 기술수요와 기술공급의 결합
- ☐ 정보생성(revealing preferences)과 짝짓기(matching)

5. 균형발전 정책의 과제

- ☐ 인재-기술-산업의 결합
- ☐ 행정구역별 발전의 한계
- ☐ 4대 초광역경제권의 구축
 - 수도권, 중부권, 서남권, 동남권: 한강의 기적에서 4대강의 기적으로
 - 지역국가론 (region state)
 - 균형발전과 세계경영의 연계

V. 미래 국가경영의 과제

1. 국가의 범위

- ☐ hard territory vs. soft territory
- ☐ 다국적 기업의 세계: 영토의 범위 (어느 기업회장 이야기)

2. 국민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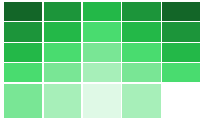
- ☐ hard nation vs. soft nation
- ☐ 다양한 혼인, 수많은 단기 거주자 ☐ 누가 국민인가?

3. 새로운 국가

- ☐ 세계화 + 정보화 → 영토의 경계, 국민의 경계 → 유동화
 - 불안정: 유동적 경계 속의 국가조직
 - 가능성: invisible continent (Ohmae Kenichi)
- ☐ 다양한 국가결합 (지역통합, FTA,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과 국제기구의 영향
- ☐ 적극적 국가경영
 - 더 넓게 진출, 더 넓게 포용
 - 상해 시민과 후쿠오카 시민을 잠재적 국민/고객으로 생각하면?
 - KTX와 무안공항을 살리는 방법?
 - 우리나라 농촌을 살리는 방법?
- ☐ 국가혁신
 - 정부혁신 - 지역혁신: 지자체, 지역주민
 - 기업혁신, 교육혁신 등

4.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

- ☐ 한국민의 창의력
- ☐ 균형발전을 통한 전국 각 지역의 발전 잠재력
- ☐ 새로운 리더십: 세종형 + 칭기스칸형



주제 발표

지역혁신과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박재묵 (충남대 교수, 본회 공동대표)

- I. 문제의 제기
 - II.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의 의의
 - III. 지역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
 - IV. 맺음말
- 참고문헌

지역혁신과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박 재 목

충남대 사회학 교수

본회 공동대표

I. 문제의 제기

국가균형발전은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 중에서도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정책의 하나이다. 참여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지방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이른바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혁신정책, 균형정책, 산업정책, 공간정책, 질적 발전 정책 등 5대 분야에 걸친 다양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 왔다. 또한 정부는 지난 2월 7일 ‘2단계 균형발전정책’보고회를 통해 새로운 균형발전정책의 기본구상과 정책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시켜 주었다.

회고해보면, 국가균형발전은 참여정부만의 정책은 아니었다. 과거의 다른 정부들도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명칭의 정책을 펴온 것이 사실이다. 역대 다른 정부가 추진해온 지역 관련 정책과 비교해 볼 때,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다른 정부의 정책과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정책 추진 의지의 강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강한 정책 의지는 여러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일단 여소야대의 정국 하에서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을 제정했다는 점과 매우 폭넓은 정책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비록 좌절되기는 했지만, 정부

가 당초에 추진하고자 했던 행정수도 건설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참여정부의 정책 의지를 충분히 헤아릴 수 있게 해준다.

둘째로, 추진 전략의 전환을 들 수 있다.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추진 전략으로 새롭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역주도성’과 ‘혁신주도성’¹⁾이라 할 수 있다. ‘지역주도성’과 ‘혁신주도성’이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국가균형발전정책에 일관성 있게 통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국가 기능의 공간적 배분을 다루는 공간정책(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의 건설 및 공공기관지방 이전)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책이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은 지역혁신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의 구축이고, 이는 바로 지역의 혁신 역량을 갖춘 세력(혁신주체)들의 상호 교동을 가능케 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잠재 역량을 발현케 함으로써 특화된 발전을 도출해 내기 위한 것이다(김영정, 2005: 216).

참여정부 출범 후 약 4년의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국가균형발전정책도 적지 않은 변화를 보여 왔다. 한편으로는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여 당초에 추진하고자 했던 정부 정책이 굴절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책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새로운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기획·추진되어 왔다. 행정수도 건설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축소·변경된 것이 전자의 대표적 사례라고 한다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와 ‘2단계 균형발전정책’의 제안은 후자의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후자의 과정을 정책의 진화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진화 과정에서 새로운 과제 또는 사업으로 기획·추진되고 있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는 2006년부터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사

1) 아주 최근에 와서는 혁신주도형 발전전략 대신에 창신형(創新型) 발전전략이라는 개념이 선호되고 있다. 창신형 발전은 창조형 발전 및 혁신주도형 발전을 모두 포함하는 발전 전략으로 정의되고 있다. 창조형 발전은 원천적으로 새로운 지식, 기술, 제품, 문화 등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강조한다면, 혁신주도형 발전은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로 일하는 과정과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성경룡, 2007: 1).

업으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 가운데 가장 늦게 시작되었다. 어떤 점에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는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래에서는 먼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이 갖고 있는 의의를 살펴보고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제들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II.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의 의의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는 “‘공간의 질’과 ‘삶의 질’을 제고하는 ‘살기 좋은 지역’ 창조”를 비전으로 그리고 쾌적하고 아름답고 특색 있는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로는 ‘공간의 질 제고,’ ‘삶의 질 제고,’ ‘도농상생형 복합생활공간 조성,’ ‘지역공동체 복원 및 형성,’ ‘지역별 특화브랜드 창출’ 등의 다섯 가지가 설정되어 있다. 이들 5대 과제는 각각 다시 몇 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1> 참조).

현재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주도 하에 행정자치부 등 정부 내 여러 부처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²⁾ 행정자치부는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등 다른 부처에 앞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공모사업을 시행하여 지난 2월 1일 30개의 국가지정 시범지역과 17개의 도 지정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선정결과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47개 시범지역을 모델별로 보면 생태형(13개), 문화형(10개), 산업형(8개), 관광형(7개)의 순으로 많았고, 가족형, 교육형, 건강형, 전통형 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국가지정 시범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국비 20억원

2) 행정자치부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및 ‘신활력 사업,’ 농림부의 ‘농어촌 생활개선 사업’ 및 ‘은퇴자마을 사업,’ 문화관광부의 ‘문화도시 사업’ 및 ‘가고 싶은 섬 사업,’ 정보통신부의 ‘정보화마을 사업,’ 해양수산부의 ‘어촌관광마을 사업,’ 환경부의 ‘생태마을 사업,’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사업,’ 보건복지부의 ‘건강도시 사업,’ 건설교통부의 ‘혁신도시 사업’ 등이 모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범주에 포함된다(정규호, 2006: 45).

과 시군비 평균 30억원이 지원되며,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살기 좋은 지역 특구’로 지정될 예정이다(행정자치부, 2007). 현 시점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의 초기이고 따라서 성공 사례의 창출이 시급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들 시범지역에 대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집중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2007-2009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 및 도지정 시범지역

구 분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5만 이하 군	국가			화천 영월 철원	단양 보은			곡성 함평 장흥 강진 진도	군위 덕령고	함양		14
	시도			횡성 양양			임실 진안 장수	구례 장성				
5만 초과 군	국가	기장				금산	완주 부안	완도 무안	의성	남해		8
	시도					서천 예산	고창	해남 보성 담양				
도농복합 시	국가		양주 안성			논산	남원		포항 안동	밀양	제주	8
	시도			강릉				광양	구미 경주			
계	국가	1	2	3	2	2	3	7	6	3	1	30
	시도	-	0	3	0	2	4	6	2	-	-	17
	총계	1	2	6	2	4	7	13	8	3	1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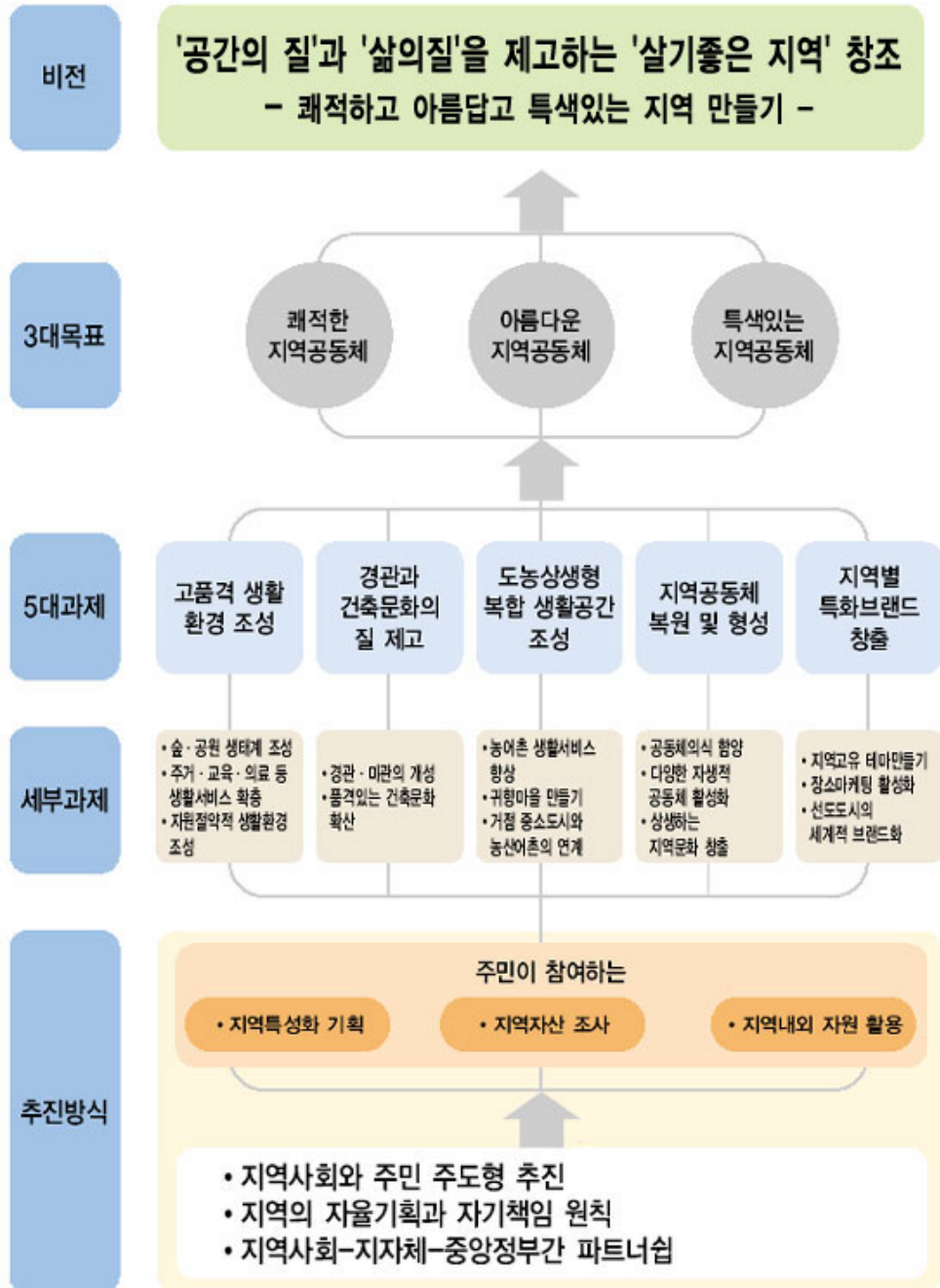
자료: 행정자치부, 2006: 4쪽.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는 아직 시작단계에 있다. 따라서 이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는 이르고 다만 사업의 구상과 계획을 중심으로 그 의의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는 한 마디로 만시지탄의 아쉬움을 느끼게 하는 정책이다. 1960년대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인구의 도시 집중³⁾과 이로 인한 대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도시에서는 ‘공

간의 질'과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온 반면에, 농촌에서는 거꾸로 인구의 과소화(過疎化)와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농촌 지역공동체는 심각한 재생산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도시와 농촌 간에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이루어진 지역적 양극화가 이처럼 도시와 농촌 모두를 '동반 몰락'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동반 몰락'의 위기라고 표현하기는 했지만, 현재 농촌사회가 맞이하고 있는 위기의 수준은 도시의 위기와는 견줄 바가 못 된다. 양양실조에 시달리는 사람과 영양과다 섭취로 인해 비만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둘 다 환자일 수는 있지만 그 고통의 내용이 같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3) 한국의 도시화율은 1950년에 21.4%였으나 2005년에 88.4%에 이르렀다.

<그림1>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정책의 체계



출처: 대통령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balance.go.kr/policy/policy8php?t_menu=1&l_menu=8)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의 전범이 될 수 있는 이른바 ‘주민참여형’ 지역 만들기 운동은 이미 오래 전부터 여러 나라에서 전개되어 왔다. 그리고 많은 성공 사례가 이미 우리나라에 소개된 바 있다. 국내에 가장 널리 알려진 ‘주민참여형’ 지역 만들기 운동으로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어 약 40여년의 전통을 갖고 있는 일본의 마치즈쿠리(まちづくり) 및 무라오코시(むらおこし) 운동을 들 수 있다. 마치즈쿠리로 대표되는 이 운동은 한 마디로 주민참여형 지역활성화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지방이 지혜를 내고 나라가 지원한다’는 것이 이 운동의 핵심 모토이다(김일철, 1994: 94).

또한 1990년대 초반 미국의 도시계획전문가들에 의해 주창된 뉴 어바니즘(new urbanism) 운동 역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안적인 도시 만들기 운동이다. 뉴 어바니즘의 주창자들은 교외화와 저밀도 개발 정책을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서 기존 도시 내에 적정 규모의 근린주거구역(neighborhood)의 조성을 제안하였다. 근린주거구역은 주거공간, 상업공간, 문화공간, 휴식공간이 공존하는 복합생활공간이며, 소득수준, 교육수준, 문화수준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주거공동체이다(김영정, 2006: 9). 일본의 마치즈쿠리가 지역 재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한다면, 뉴 어바니즘은 도시 공동체 복원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명칭이나 운동 목표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와 가장 유사한 운동은 미국의 ‘살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Creating Livable Community)’이다. 미국의 ‘살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는 기존의 도시 및 교외의 개발 방식이 주민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대안적인 지역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삼고 진행되고 있다. 이 운동이 주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도시 문제는 자동차 의존으로 인한 혼잡과 대기 오염, 트인 공간의 상실, 도로 및 공공시설의 개선 비용 증가, 경제적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 공동체 의식의 상실 등이다. 따라서 미국의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과 뉴 어바니즘 운동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 운동은 주로 비영리민간단체에 의해서 전

개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통일성 있는 목표를 도출해 내기가 쉽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강조되는 목표로는 ‘보다 건강한 인간 및 자연 환경,’ ‘보다 지속가능한 경제,’ ‘서민 대중의 능동적 참여,’ ‘평등한 사회’ 등을 들 수 있다.⁴⁾

뒤늦게 제안되기는 했지만,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는 여러 가지 점에서 주목할 만한 정책이다. 무엇보다도 ‘삶의 질’의 제고를 강조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외형적 성장이 아닌 ‘질적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 동안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많은 사업들이 도시개발 및 산업진흥에 치중되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때문에 사회 일각에서는 이러한 개발 및 경제 중심의 사업 추진이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점에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는 과거 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은 물론 참여정부 하에서 그 동안 추진되어온 여타의 균형발전 관련 정책과도 일정한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로 주목되는 것은 ‘공간의 질’, 즉 지역의 환경·생태적 조건의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간의 질’ 제고를 위한 세부 사업으로는 숲·공원 생태계 조성, 경관·미관이 개선 및 품격 있는 건축문화 확산이 제시되어 있다. 1992년 리우환경회의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이념이 전 지구적 수준으로 확산되면서 대부분의 개발 사업이 녹색과 지속가능성을 표방하게 되었지만, 많은 경우에 이들 이념들은 구두선에 그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 때문에 환경운동 진영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의 사업이 지역의 환경 및 생태계를 훼손·파괴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하는 우려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우려가 곧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신개발주의’라는 비판으로 이어져 왔다(조명래, 2006: 57).⁵⁾

4) <http://www.lgc.org/membership/index.html> 참조

5) 조명래에 따르면, 개발주의가 환경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경제우선주의, 보전을 배려하지 않는 개발우선주의계획적 절차를 대신한 성과지상주의를 중요한 특징으로 한다면, 신개발주의는 환경과 경제의 상생, 보전과 개발의 균형, 선계획/후개발의 원칙 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개발 본래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고 한다(조명래, 1006: 57).

셋째로, 지역 발전 노선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이는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가 특색 있는 지역공동체 만들기를 3대 목표의 하나로 삼고, 지역별 특화브랜드 창출을 5대 과제의 하나로 삼고 있는 데서 드러나고 있다. 참여정부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전략산업 육성 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들이 IT, BT 등 이른바 첨단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선정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넷째로, 사업 기획과 집행에 있어서 지역 주민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이른바 ‘내생적 발전전략’(endogenous development strategy)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역사회 또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자기 책임 하에 추진케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추진방식을 지역주도형 또는 주민참여형으로 설정한 것은 각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한 자원과 자산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지역을 만들어 나가게 한다는 특색 있는 지역공동체 만들기와의 연관되어 있다. 지역주도형 또는 주민참여형은 결국 중앙정부의 역할을 제도 개선과 지원으로 제한하고, 그 대신에 사업의 구상과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사업 추진은 주민과 지자체가 주도케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약하자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는 사업의 목표와 추진 방식에 있어서 기존의 지역개발은 물론 참여정부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른 국가균형발전 관련 사업과도 일정한 차별성을 갖는 주민참여형 지역활성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III. 지역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는 기본적으로 지역과 주민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성패는 해당 지역 사회의 사업 수행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한 과제들도 대부분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 주민이 해결해야 할 것들이다.

1. 추진 주체의 형성

지역주도형 또는 주민참여형 지역발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역시 추진 주체 형성의 문제이다. 어떤 점에서 추진 주체의 형성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다른 나라의 유사 운동의 성공 사례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은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낸 힘의 원천으로 지자체장의 탁월한 리더쉽과 지역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박용남, 2006: 448; 451; 박광순 등, 2001a: 253-260; 박광순 등, 2001b: 77-78).

연구자에 따라서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에 주된 성공 요인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하기도 한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살고 싶은 도시는 뛰어난 전문성과 탁월한 리더쉽을 가진 지자체장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주 보편적인 현상’인 반면에 ‘오랜 지방자치의 전통과 역사를 가진 선진국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들은 대부분이 주민 참여와 협치를 중요시하는 단체장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박용남, 2006: 448). 그러나 단체장의 리더쉽과 주민참여는 비록 시기에 따라 다른 비중으로 나타나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양자는 성공적인 지역사회 만들기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마치즈쿠리의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는 유후인(湯布院)의 경우에는 정장(町長) 주도, 즉 단체장 주도과 주민 주도가 연속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박광순, 2001b: 253).

<그림 2>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의 추진 전략



출처: 박동진(2006): 19쪽.

따라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의 성공 요인은 리더십 또는 주민참여 중 어느 한 가지가 아니라 양자의 결합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어떤 점에서 단체장의 리더십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의 상수(常數)라고 한다면, 잘 작동하는 거버넌스(governance)의 구축과 이를 통한 주민참여의 확보는 변수(變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박재목, 2006: 46). 결국 추진 주체 형성에 있어서 최대의 관건은 주민 참여의 확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정부에서도 주민/지역사회, 지자체 및 중앙정부 간의 파트너십을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다(<그림 2> 참조).

그러나 주민 참여와 자치의 경험이 일천한 우리의 상황에서 잘 작동하는 거버넌스의 구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거버넌스를 통한 의사결정을 시도하는 경우에도 오랜 기간 지속된 관료 우위의 전통, 효율성의 압박, 주민 측의 전문성 결여 등의 조건들 때문에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주민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에서 ‘전문가 주도’ 또는 ‘행정 주도’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현재의 상황에서 잘 작동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주민의 능력 향상과 권능강화(empowerment)가 이

루어져야 한다.

2. 토착적 지도자 양성과 주민 학습

주민의 능력 향상과 권능강화를 위해서는 토착적 지도자가 출현하고 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여 주민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도자가 출현하고 주민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은 도시와 농촌 간에 큰 차이를 보인다. 도시의 경우에는 인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할 뿐만 아니라 시민운동이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력의 형성이 비교적 쉬운 편이다. 따라서 도시의 경우에는 주민 조직화 노력이 학습공동체 형성과 주민 권능강화의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촌의 경우에는 반대로 인적 자원 자체가 크게 부족하고 시민운동 역시 활발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토착 지도력의 형성 자체가 쉽지 않다. 따라서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현재의 단계에서 지원해야 할 일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이끌고 나갈 핵심 집단을 배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가 47개 시범지역을 선정·발표하면서 선정지역 사업 관계자를 중심으로 공동학습과 외국 선진사례 견학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사후적으로나마 주민 역량 강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 것이다.

3. 토착 주민 중심의 목표 설정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의 기획 과정에서는 사업을 통해 누가 실질적인 수혜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요구된다. 기존의 지역개발사업에서처럼 사업의 효과가 주로 외지의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일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많은 도시들이 추진하고 있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의 재개발 사업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재개발사업은 흔히 퇴락된 기존 주택 거주자인 저소득층을 다른 저소득층 거주지역으로

이주시키고 그 대신 중산층을 새로운 거주자로 맞이하는 결과를 빚어 왔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은퇴자 마을 조성의 경우에도 사업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누가 될 것인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아마도 대부분의 수혜자는 도시의 중산층일 것이다.

이러한 수혜자 전치(轉置, displacement) 현상은 사업 효과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장소의 발전’(place's prosperity)인지 ‘사람의 발전’(people's prosperity)인지 분명치 않은 데 기인한다(정규호, 2006: 48). 때로는 지역의 주민조차도 지가 상승 등에 대한 기대 때문에 장소의 발전을 주민의 발전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심지어 장소와 사람을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지역 만들기가 성공적인 지역에는 외지로부터 자본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대표적인 마치즈쿠리 선진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유후인의 경우에도 외지 자본이 대량생산된 상품을 들여와서 유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 토산품으로 판매함으로써 토착산업과 토착유통업이 잠식되고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고바야시 가야코, 2006: 133).

분명한 것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의 주된 수혜자는 현지 주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발전이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엄격하게 구분될 필요가 있다. 유후인의 마치즈쿠리를 이끌어 온 고바야시 가야코의 소회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유후인 마을이 지금 새롭게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마치즈쿠리의 기본은, 그래도 역시 ‘거주하는 마을 사람 자신이 기분 좋게 살 수 있는 마을이었으면 한다는 생각이다. 첫머리에서도 설명했듯이 이 생각이야말로 유후인이 옛날부터 변치 않고 행해온 마치즈쿠리의 원점이며, 지금도 기본으로 있는 것임에 변함없다(고바야시 가야코, 2006: 145).

4. 3중의 지속가능성

지속가능성이라는 용어를 다소 느슨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는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지속가능해야 한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생태적 지속가능성은 이미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의 비전과 목표 그 자체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업 추진에서 간과되기 쉬운 부분은 오히려 문화적 지속가능성과 경제적 지속가능성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문화적 지속가능성'이란 문화적 연속성을 의미한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는 어떤 형태로 추진되든 간에 지역에 새로운 건조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공간구조와 주민의 생활양식 자체의 변화를 유발하게 된다. 이 경우 새로운 변화는 가능한 한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농촌의 경우, 주택의 형태는 근대화 과정과 새마을운동을 겪으면서 이미 크게 바뀌었지만, 다행히도 마을의 공간구조는 과거의 형태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마을의 공간구조는 그 자체가 문화적 자산이다. 따라서 마을의 구조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건조물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적 지속가능성'이란 곧 경제적 안정성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들은 장기적으로 존속되고 경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야만 <그림 1>에 제시된 추진방식, 즉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이 될 수 있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마을의 경우,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이 용도가 없어 유평화되거나 운영비 부담 때문에 가동되지 않는다면 그 사업은 경제적 지속성을 상실하는 셈이 된다. 공모제의 방식을 통해 지원 대상 지역을 선정하는 경우, 지원금의 확보를 위해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결여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IV. 맺음말

앞에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의 성공적 추진에 필요한 몇 가지 과제를 논의하였다. 이들 과제들은 대부분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가 지역 만들기를 위한 정책 형성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로, 지역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한 사업추진계획이 추가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둘러싼 여건이 우선 도시와 농촌 간에 크게 다르고 도시 중에서도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에 다르다. 지나치게 세분된 모델을 설정하는 것은 지역의 창발성을 제약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겠으나, 적어도 지역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크게 나누고 정책 체계를 마련하는 일은 필요하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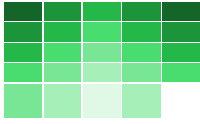
둘째, 공모제를 통한 지원방식에 대한 숙고와 재검토가 요구된다. 현 시점에서는 중앙정부가 지역에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자극을 주고, 또 이 운동의 확산을 위해 성공 사례를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공모제를 통해 시범지역을 집중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공모제를 통한 선택과 집중은 균형발전의 이념이나 지역주도형 발전전략의 기본 취지와 조화되기 어려운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역사회는 중앙정부가 배분하는 자원을 경쟁적으로 확보하는 데 힘을 쏟아 온 반면에 자기주도적 지역발전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데는 미숙했다. 이렇게 된 데는 지방자치의 경험이 일천한 탓도 있겠지만, 그 동안의 중앙공급식 지역발전 추진방식에 적응하면서 형성된 지역의 타성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는 이러한 타성으로부터 벗어나는 지역사회의 자기혁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공모제에 대한 대안으로는 일본의 마치즈쿠리 사업의 경우처럼 지자체의 규모별로 일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이 경우에도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의 제공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요컨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는 가능한 한 빨리 정부 정책으로부터 지역 운동으로 전

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농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균형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일자리, 교육 여건, 문화 향수의 여건이 현재처럼 양극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운동만으로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으로 전환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어떤 점에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의 토대 위에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운동이 활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영정, 2005 '자립형 지방화와 지역혁신체계,' 성경룡·이수훈·박양호 외, 「동북아시아 한반도 공간구상과 균형발전전략」.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15-243.
- _____, 2006 '지역사회 공동체의 재발견: 공동체 복원 및 활성화 정책의 방향과 과제,' 「지역사회 공동체에 대한 성찰과 재활성화를 위하여」(한국사회학회기획학술심포지엄 자료집<2006년 5월 3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3-21.
- 김일철, 1994 「일본농촌과 지역활성화 운동」. 나남.
- 고바야시 가야코, 2006 '유후인과 마치즈쿠리,' 니시카와 요시아키·이사 아쓰시·마쓰오 다다스(신영환·전영효·정윤희 역), 「시민이 참가하는 마치즈쿠리 [사례편]: NPO·시민·자치단체의 참여에서」. 한울, 128-148.
- 박동진, 2006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정책의 현황과 과제: 정책, 사례 시사점을 중심으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의 이론과 전략」(한국환경사회학회·대전발전연구원·충남대 사회과학연구소 주최 공동학술대회 자료집<2006년 11월 3일-4일,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대강의실>), 16-35쪽.
- 박광순 등, 2001a 「일본 산촌의 지역활성화와 사회구조」. 경인문화사.
- _____, 2001b 「일본 산촌의 지역경제와 사회정책」. 경인문화사.
- 박용남, 2006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한 자발적 노력: 정부, 지자체, 전문가, 시민의 노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제이플러스 애드, 432-454.
- 박재묵, 2006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대안적 거버넌스,' 「살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과 지방의 미래」(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대구대학교 공동주최 정책토론회 자료집<2006년 9월 8일, 대구대학교 본관 강당>), 43-70.
- 성경룡, 2007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선진국 진입 전략,' http://www.balance.go.kr/datas/data_view.php?
- 정규호, 2006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과 지역 거버넌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이론과 전략」(한국환경사회학회·대전발전연구원·충남대 사회과학연구소 주최 공동학술대회 자료집<2006년 11월 3일-4일,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대강의실>), 35-52쪽.
- 조명래, 2006 「개발정치와 녹색진보」. 환경과 생명
- 행정자치부, 2007 보도자료(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대상지역 최종 확정·발표: 국가지정 30개, 도 지정 17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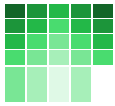


결성회의

대전충남지역혁신연구회 결성회의

안정선 (공주대 교수, 본회 상임공동대표)

- I. 창립배경 및 추진경과 보고
- II. 안건심의내용
 - 1. 규약(안) 전문
 - 2. 조직구성 및 임원(안)
 - 3.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1. 설립취지 및 목적

- 세계화와 지식기반시대로의 전환에 따라 국가단위보다는 지역단위의 경쟁력이 크게 강조되면서 산·학·연·관의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혁신체계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지역혁신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란 대학, 기업, 연구소,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 내의 혁신주체들간의 활발한 상호협력과 공동학습을 통하여 지역의 산업생산체계, 과학기술체계, 기업지원 체계를 효율적으로 접합시키고 인력양성, 정보·통신 등 혁신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모든 활동과 이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말합니다.
- 여기서 지역혁신협의회란 지역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지역혁신체계(RIS)를 전체적으로 망라하는 지역전체수준의 대표적인 체계를 말하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8조에 의하여 각 시·도에 두도록 법으로 정한 기구로서,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의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시·도 협의회의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아울러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의 혁신주체간 교류활성화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지역 혁신주체간 교류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각 지역별로 <지역혁신연구회>를 결성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주체는 지역소재 대학의 교수, 연구소의 연구원, 지방행정 관료, 시민단

체 등 지역 혁신 전문가로 지역특성에 맞게 지역의 혁신체계를 구축하여 연구수행 및 혁신분위기를 고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대전·충남지역에서도 지역혁신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산·학·연 공동개발 연구나 전략산업 및 과학R&D특구 등 지역사회 발전모델이 크게 수정되고, 환경·복지·문화 등의 영역에서 새로운 발전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기대 대신에 지역혁신의 개념이 기술혁신이라는 좁은 틀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오히려 균형발전이 새로운 개발주의로 표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시민사회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 이에 당초 의도했던 지역시민사회의 자발적 혁신역량을 기초로 하여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제도혁신과 문화혁신으로까지 확장하는 ‘총체적 혁신’의 관점에서 지역혁신(regional innovation), 복지공동체(welfare community),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한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이 유효토록 하기 위해서는 설립 제한을 두지않은 <지역혁신연구회>의 새로운 확충을 통해 다각적인 차원에서 <지역혁신협의회>와 긴밀히 연계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설립되는 <대전충남지역혁신연구회>는 다양한 주체들간의 새로운 혁신역량을 모아내고 상호협력을 유도해냄으로써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혁신체계 구축 및 지역혁신관련 연구수행 및 사례조사, 지역혁신을 위한 추진전략 등을 모색해나갈 연구중심의 모임으로서, 정치적 이해관계는 배제하는 모임입니다.

2. 역할과 기능

- 경제·산업정책 점검 및 제언
- 경제발전 정책 및 프로젝트 연구 개발

- 산·학·연·관·시민사회 연계 방안 연구
- 정보교환 및 조사연구 활동
- 혁신사례 소개 및 혁신과제 발굴
- 각 분야 혁신 체계 구축 방안 연구
- 지역의 인재 육성 방안 연구
- 지역의 사회, 문화 분야 혁신방안 연구
- 지역의 현안 및 이슈 해결 방안 연구

3. 구성방향

- 대전충남지역혁신연구회는 기술혁신, 제도혁신, 문화혁신 등 ‘총체적 혁신’의 관점에서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혁신체계 구축을 위하여 대전충남지역 각종 연구기관, 지역대학, 기업체, 언론,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혁신역량을 모아 상호협력을 도모한다.
- 대전충남지역혁신연구회 활동의 1단계는 2008년 완료되는 제1차 균형발전5개년계획(2004~2008)에 맞추어 올해 1년간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한시적 기구로 결성하며, 활동시한이 끝난 후의 조직 및 활동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여 결정한다.
- 회원의 대상은 대전충남지역 각종 연구기관, 지역대학, 기업체,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중심으로 개인 참여를 기본으로 하되, 단체 추천을 허용한다. 단 지역과 학교, 이공계 등을 고려하여 골고루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구성한다.
- 폭넓은 참여와 지역비전 모색을 위한 전문성 확보라는 이중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참여를 확대하면서도 효율적인 집행구조를 형성하기로 한다.

4. 추진경과

2006.11.17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성경룡 위원장과의 지역간담회

- 참석자 : 성경룡, 한동환, 김동주, 박재묵, 안성호, 안정선, 조연상, 김제선, 박상우

2006.12.19 (가칭)대전충남지역혁신연구회 창립 준비위원회

- 회원구성, 공동대표 및 상임공동대표 선임, 분과 구성에 관한 논의
- 창립대회에 관한 논의 : 2007년 1월 30일 기념세미나로 개최기로 함.
- 참석자 : 박재묵, 안성호, 안정선, 이상선, 조연상, 김제선, 윤혜정

2006.12.21 전국지역혁신연구회 간사단회의(국가균형발전위원회)

- 2007년도 운영사업 설명회 / 참석자 : 김제선

2007. 1.11 전국지역혁신연구회 회장단 및 간사단회의(국가균형발전위)

- 임시총회 개최 : 2007년도 임원 선출 및 정관 보고
회장(이재은/경기), 수석부회장(안승욱/경남)
부회장(안정선/대전충남, 양창식/제주), 감사(정종현/광주전남, 나종만/부산)
- 참석자 : 안정선, 류진석, 박상우

2007. 1.25 (가칭)대전충남지역혁신연구회 창립 준비모임

- 조직 구성안 세부논의, 창립기념세미나 일정변경 및 계획안 논의
- 규약 및 사업계획안(예산)은 차기 전체 준비모임에서 논의기로 함
- 참석자 : 박재묵, 이상선, 김제선, 박상우, 염대형, 윤혜정

2007. 2. 7 2단계 균형발전정책 대국민보고대회(안동)

- 참석자 : 박재묵, 안정선, 안성호, 이상선, 김검훈, 박상우

2007. 2. 9 대전충남지역혁신연구회 준비위 참가제안 및 연구위원 추천 의뢰

2007. 2.14 대전충남지역혁신연구회 준비위원회 전체 준비모임

- 조직구성안, 사업계획안, 규약안, 창립세미나 일정변경 및 행사안 세부논의
- 참석: 강호정, 기영석, 김검훈, 류진석, 심문보, 박재묵, 안정선, 여영환,
윤철호, 이갑숙, 이권현, 이기동, 이상선, 임현균, 최호택, 박상우

2007. 2.23 대전충남지역혁신연구회 결성회의 및 창립 기념 세미나



안전심의

<의안 1호> 규약 제정의 건

제안자 : 대전충남지역혁신연구회 준비위원회

[주문사항]

아래와 같은 대전충남지역혁신연구회 규약(안)을 제출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충남지역혁신연구회 규약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대전충남지역혁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칭한다)로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산·학·연·민·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회원간 활발한 정보교환 및 연구활동 등을 통하여 대전·충남지역의 경제, 행정, 사회, 문화를 비롯한 각 분야의 혁신을 창출하고 확산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한다.

제3조 **【사무실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실은 대전광역시 또는 충청남도에서 둔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혁신 역량 강화 등과 관련한 정책 점검 및 제언
2.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정책 및 프로젝트 연구 개발
3. 산·학·연·민·관 연계 방안 연구
4. 정보교환 및 조사연구 활동
5. 혁신사례 소개 및 혁신과제 발굴
6. 각 분야 혁신 체계 구축 방안 연구
7. 지역 인재 육성 방안 연구
8. 지역 현안 및 이슈 해결 방안 연구
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

1. 본 회의 회원은 대전·충남지역의 기업, 대학, 연구기관, 행정기관,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지역혁신 주체로 적극 활동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로 구성한다.
2. 본 회의 회원이 되려면 소정의 서식에 의한 신청과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본 회의 모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토의에 참여할 수 있고, 연구발표회 등 본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3.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제7조 【자격정지 및 상실】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자로 운영위원회의 제명 결의가 있는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단, 회원의 제명을 위해서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회원의 탈퇴】 본 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9조 【임원의 종류】 본 회의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공동대표 6인 이내 (상임공동대표 1인)
2. 감 사 2인 이내
3. 운영위원장
4. 공동대표를 포함한 각 분과별 연구책임자 전원으로 구성하는 당연직 운영위원
5.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구성하는 선임직 운영위원

제10조 【임원의 선출】

1. 공동대표와 감사, 운영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을 추가 선임할 수 있다.
3.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 발생후 최초로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에서 보선하며, 이때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 임기의 연장】 총회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개최되지 못하여 차기 임원이 선출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기존 임원의 임기는 차기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공동대표,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동대표는 본 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운영위원장은 공동대표를 보좌하여 본 회의 일상적인 의사결정과 업무를 처리한다.

3.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중요한 회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 또는 공동대표로부터 위임받은 회무를 수행한다.

제14조 【상임공동대표의 직무대행】 상임공동대표가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어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대표 중 다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본 회의 사업과 재정업무를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6조 【고문, 자문위원】

1. 본회는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고문 및 자문위원은 공동대표단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할 수 있다.

3.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 회의가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제반 사업계획 및 추진과 관련한 건의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제 4 장 총 회

제17조 【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1.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개시후 3월 이내에 개최하며, 연 1회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회원 4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개최사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때 소집한다.

제18조 【총회의 소집】 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공동대표는 회의 7일전까

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모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총회의 성립 및 의결】

1. 총회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회원이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할 시는 출석 및 표결에 관한 사항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규약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본 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중대한 사항

제21조 【총회 의결의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3. 본 회와 의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제22조 【의사록】 총회의 의사록은 공동대표와 출석 운영위원 2명 이상이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한다.

제 5 장 운 영 위 원 회

제23조 【운영위원회 구성원】 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 운영위원장, 각 분과의

연구책임자, 사무국장 등 당연직 운영위원과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되는 선임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4조 【운영위원회 소집】

1.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동대표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1) 공동대표 또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공동대표와 운영위원장을 제외한 재적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2.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공동대표는 회의 7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운영위원회 구성원 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다음의 사항은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의 개정
2. 임원의 불신임과 회원의 징계와 복권

제26조 【운영위원회 의결의 제척사유】 운영위원회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회원의 자격상실에 관한 의결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3. 본 회와 의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제27조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5. 규약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6. 기타 주요사항

제 6 장 특별위원회와 사무국

제28조 【특별위원회의 설치】 본 회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9조 【사무국】 본 회의 제반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직제는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 【경비】 본 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찬조금,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1조 【회비부과 및 징수】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2조 【예산집행 및 예결산 보고】

1. 예산 및 사업회계의 집행권은 공동대표가 가진다.
2. 공동대표는 회계연도말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3. 공동대표는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후 2월내에 편성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8 장 부 칙

제34조 【규약의 개정】 규약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발의되고 총회에서 개정한다.

제35조 【해산】 본 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6조 【잔여재산의 처분】 본 회가 해산시 잔여재산에 대한 처분은 해산을 의결하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37조 【제규정】 본 규약 시행에 필요한 제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제정·시행한다.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38조 【준용】

제39조 【시행】 이 규약은 창립총회의 인준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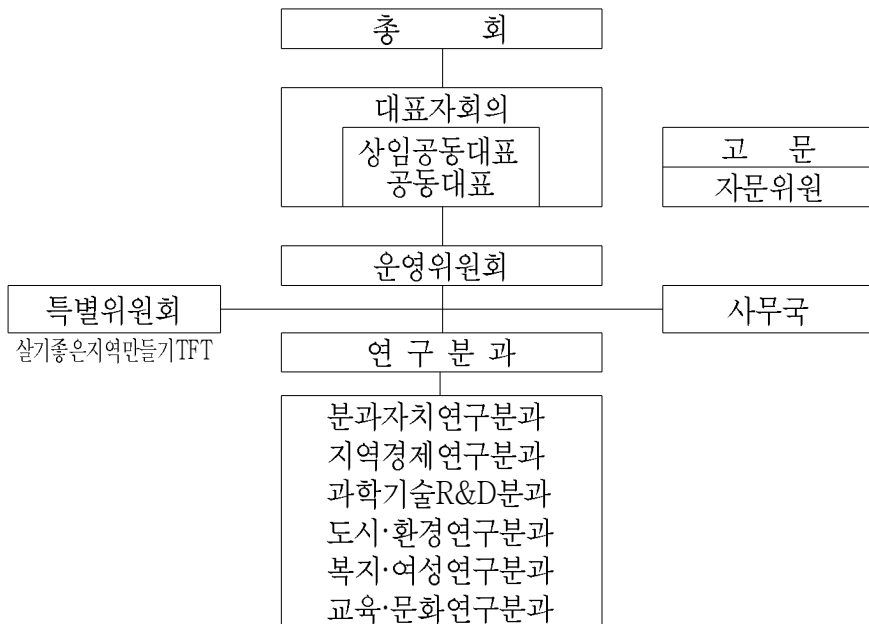
<의안 2호> 임원 선출의 건

제안자 : 대전충남지역혁신연구위 준비위원회

[주문사항]

아래와 같은 대전충남지역혁신연구회 조직구성 및 임원후보(안)을 제출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직표



2. 임원 후보(안)

○ 고문 및 자문위원 : 아래와 같은 인사들에 대해 추대 요청

혁신협의회장, 단체(의회)장, 국회의원, 대학총장, 언론사대표, 주요기업대표 등

- 공동대표 : 안정선(공주대 교수,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이사장) *상임공동대표
박재묵(충남대 교수, 대전환경운동연합 고문)
안성호(대전대 교수,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대표)
이상선(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조연상(목원대 교수, 대전경실련 공동대표)
- 감 사 : 기영석(목원대 교수), *충남 1인(미추천)
- 운영위원장 : 류진석(충남대 교수,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소장)
- 운영위원 :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선임직 운영위원 위촉
- 연구분과 :
 - 분권자치연구분과장 : 최호택(배재대 교수)
 - 지역경제연구분과장 : 박종찬(고려대 교수)
 - 과학기술R&D분과장 : 허철구(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박사) *미정
 - 도시·환경연구분과장 : 강현수(중부대 교수)
 - 복지·여성연구분과장 : 이갑숙(대전시민사회연구소 이사)
 - 교육·문화연구분과장 : 미추천
- 특별위원회 : 살기좋은지역만들기 TFT
- 사무국장 : 박상우(대전시민사회연구소 사무처장)
- 간 사 : 염대형(대전시민사회연구소 연구원)

※ 일상회무는 공동대표, 운영위원장, 분과장, 사무국이 협의처리토록 규정함.

[연구위원 명단] *2월 22일(목) 17:00시 현재 수락대상자(76명)에 한하여 표기함.

강락영(목원대 사범대학)	강영주(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
강호정(배재대 경영학과)	강희조(목원대 멀티미디어통신학과)
고성길(공주녹색연합 운영위원장)	구우희(대전시 서구의원)
권기대(공주대 공과대학)	권기영(공주대 전기및전자공학과)
금홍섭(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기영석(목원대 행정학과)
김겸훈(대전시민사회연구소 상임연구위원)	김동선(공주대 화학공학부)

김봉구(대전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소장)	김선재(배재대 지역경제)
김선태(대전대 환경공학과)	김영백(배재대)
김용동(대전발전연구원 연구원)	김일한(배재대 생명공학)
김정옥(대전외제 21 사무국장)	김제선(대전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종남(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재근(대전일보 경제과학부장)
김창봉(공주대 정보통신공학)	김철경(목원대)
김태일(대전대 간호학과)	김학원(대전시 시의원)
김홍수(목원대 신학과)	문상국(목원대 반도체설계학과)
박석문(백석대 국어학과)	박성균(공주대 공과대학)
박정현(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박종찬(고려대 경영학부)
박진호(대전발전연구원 국장)	배성우(목원대 경영학)
백원철(공주대 사범대학 한문교육과)	복진국(푸른충남 21 사무차장)
서명석(공주대 대기과학)	손규성(한겨레신문사 기자)
신현호(백석대 영문학과)	양광호(공주영상대학 관광개발학과)
여영환(대전홍사단 사무처장)	육근철(공주대)
윤화석(백석대 기독교교육학과)	이갑숙(대전시민사회연구소 이사)
이권현(한국폴리텍IV 대학 학장)	이규봉(배재대 수학과)
이성희(배재대 유아교육과)	이승기(공주대 농업기계학과)
이승재(백석대 교육사회학)	이시영(배재대 조경계획및설계학과)
이영섭(주)진합 회장, 대전상공회의소 부회장)	이윤희(목원대 사회복지학과)
이인세(대전충남생명의숲 사무국장)	이재완(공주대 사회복지학과)
이정일(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이종완(공주대 동물자원학)
이종호(공주대 상업교육학과)	이찬희(공주대 문화재보존과학과)
이충재(대전YMCA 사무총장)	이택혁(배재대 분자과학과)
임경호(공주대 환경공학학과)	임덕순(한국미래정책연구원 박사)
임성복(대전발전연구원 연구원)	장수찬(목원대 행정학과)
장창기(공주대 생물교육과)	정남수(공주대 공학박사)
정대관(목원대 경찰법학과)	조인성(경제통상학부)
조찬재(대전상공회의소 부장)	최충식(시민환경연구소 실장)
최호택(배재대 행정학과)	허재영(대전대 토목공학)
허철구(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박사)	허태정(대덕연구개발특구 복지센터 소장)

<의안 3호>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의 건

제안자 : 대전충남지역혁신연구회 준비위원회

[주문사항]

아래와 같은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제출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주요 사업계획(안)

■ 사업목표

- (가칭)대전충남지역혁신연구회의 설립 및 혁신역량 확충
 - 지식인, 기업인, 언론인, 학자, 시민단체 등 지역의 혁신역량 재정비
 - 자발적인 혁신역량을 기초로 하여 지역시민사회의 새로운 동력 형성
 - 민관 파트너십에 기초한 지역거버넌스 구축의 전기 마련
- 조사연구·연찬 등 지역혁신 정례포럼 활성화
 - 총체적 혁신의 관점에서 의제 재설정 및 구체적 혁신방안 도출
 - 지역혁신의 방향과 과제 모색 및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정례포럼 추진
 - 지역 현안에 대한 전문가 TF 구성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TFT 구성 및 운영
- 지역혁신 주체들간의 상호협력과 대내외적 네트워킹 활동 강화
 - 타 지역의 혁신 성과와 경험 공유를 위한 활발한 교류 및 행사 참여
 - 지역대학 구성원 등을 비롯한 혁신주체간 온라인 커뮤니티 강화

- 지방정부의 지역혁신 관련 정책의 능동적 참여
 - 지역혁신협의회 활동과 긴밀한 연계 및 주체적 참여
 - 연구결과를 지방정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허브(hub)로서의 역할 수행

■ 사업과제

- 대전충남지역혁신연구회 창립 및 기념세미나 개최
 - 대전·충남지역내 지식인, 기업인, 언론인, 학자,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혁신 역량을 재정비하여 지역시민사회의 새로운 혁신주체 동력 형성
 - 추진일정
 - 2007년 1월 : 대전충남지역혁신연구회 창립 주비위 및 준비위 구성
 - 2007년 1월 ~ 2월 : 과제 및 방향 설정을 위한 전체 워크숍 개최
 - 2007년 2월 : 대전충남지역혁신연구회 창립대회 및 창립기념세미나 개최
- 대전/충남 지역혁신포럼 정례(지역순회) 개최
 - 기술혁신, 제도혁신, 문화혁신을 포함하는 총체적 혁신의 관점에서 지역을 새롭게 발전시킬 의제 재설정 및 구체적 혁신방안 도출을 위한 정례적인 지역혁신포럼 순회 개최
 - 추진내용
 - 1) 규모있는 공개토론회, 원탁회의, 집담회, 간담회, 세미나 등 추진
 - 2) 방송 토론회, 강연회 등의 방식(지역민방 또는 케이블방송 협의추진)
 - 3) 대전의 경우, 지역현안에 대한 공개토론회 : 참여하는 단체(기관) 주관
 - 4) 충남의 경우, 시군별 순회 간담회(토론회) 개최 : 지역단체 주관
 - 추진일정
 - 2007년 2월 : 창립기념 세미나
 - 2007년 3월 ~ 8월 : 지역현안 토론회 (5~6회 개최)
 - 2007년 3월 ~ 8월 : 지역순회 간담회, 집담회 (10회 개최)
 - 2007년 7월 : 방송토론회 또는 강연회 (1회 개최)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TFT 구성, 운영 및 지역리포트 발간
 - 총체적 지역혁신의 관점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구체적 혁신방안 도출을 위한 TF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단계적인 지역리포트 발간
 - 추진내용
 - 1)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TF 구성 및 워크숍 개최
 - 2)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 관한 단계적인 지역리포트 발간
 - 추진일정
 - 2007년 2~3월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TF 구성안 마련 및 책임자 선정
 - 2007년 3~7월 : 운영 및 내부워크숍 개최 등
 - 2007년 6~8월 : 지역리포트 발간

- 지역혁신 주체들간의 상호협력 및 대내외적 네트워킹 활동 강화
 - 타 지역의 혁신 성과와 경험 공유를 위한 교류 및 각종행사 참석(상시적)
 -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내부서버 활용, 지역혁신연구회 홈페이지 개설(3~4월)
 - 지역대학 구성원 등을 비롯한 혁신주체들에 대한 메일링서비스 지원

- 지방정부의 지역혁신 관련 정책의 능동적 참여
 - 대전/충남 지역혁신협의회 활동과 긴밀한 연계 및 주체적 참여 (상시적)
 - 연구결과를 지방정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허브(hub)로서의 역할 수행
 - 연구결과 및 각종 연구통계표본의 일상적 공유를 위한 온라인 정보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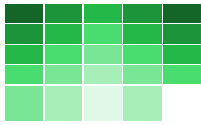
2. 2007년도 예산(안)

수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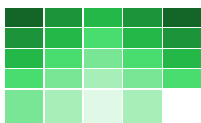
항목		예산	산출근거
회비	회비	1,500,000	50,000*30명*연회비
	후원금	3,000,000	1,000,000*3회 (토론회 공동주최 등)
사업수입	운영사업	50,000,000	
	보조사업	5,000,000	사업비 추가지원
기타수입	기타수입	500,000	
합계		60,000,000	

지출부

항목		예산	산출근거
인건비	인건비	8,400,000	700,000*12월*1명
직접사업비	행사비	25,000,000	토론회, 지역순회간담회, 창립세미나
	회의비	1,200,000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TFT 운영비
	자료구입비	600,000	60,000*10월
	홍보사업비	1,000,000	홈페이지 구축
	출판홍보비	10,000,000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리포트 발간
	기획사업비	10,000,000	공동사업 및 연구용역비
간접사업비	여비	2,000,000	국내출장여비(연구진 및 사무국)
	제압비	1,800,000	180,000*10월(각종수용비, 사무운영비)
기타지출	기타지출	0	
합계		60,000,000	



MEMO



MEMO



MEMO
